

〈특집〉

『서울대학교 法學』 50년 역사

梁 承 圭*

I. 머리말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나, 남북으로 갈리고 좌우익의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이어졌다. 미군정청은 1946년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을 발표하여 서울대학교가 탄생했고, 우리 법과 대학은 경성대학 법문학부와 경성법학전문학교를 통합 개편한 것이다.

서울대학교가 출범한 후 1년 남짓 국내안 반대운동이 이어져 혼란스러웠고, 게다가 1950년 6.25 전쟁으로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었다. 1951년 이른바 1.4 후퇴로 부산 피난지에서 대학교육이 명맥을 유지하다가 1953년 휴전이 이뤄지고 차츰 국가가 안정을 찾으면서 법학교육도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수는 연구에 전념하여 학생을 가르치고, 그 연구의 성과를 발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해방 이후 사회적 혼란과 6.25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사회가 안정을 찾으면서 교수의 연구 성과로서 저서(법학교재)의 출간이 늘어나고, 연구논문을 발표할 학술지의 간행이 요구되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1959년 6월에 “서울대학교 法學” 창간호를 발간하여 올해로서 그 발간 50주년을 맞이하여 통권 제150호를 세상에 내놓았다. 우리가 오늘 이 위업을 기리기 위한 학술대회를 열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법학을 창간할 당시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의 상흔이 아직 남아 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었다. 그러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학의 발전은 물론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희생을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바쳐 주신 우리 모두의 은사이시고 고인이 되신 선배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늘에서 후학들을 살피 주시기를 기원한다.

서울대학교 법학 제1권 제1호의 편집후기를 아래에 적기로 한다.

대학의 사명은 연구에 있다. 대학교수는 그 연구의 성과를 한편으로는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수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논문으로 발표함으로써 직접 입법·사법·행정에 대하여 지침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외국에 있어서는 모든 법과대학이 예외 없이 정기적으로 법학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그렇거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해방 후의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대학들이 발족하여 우선 대학으로서의 외면적 질서를 세우는 데에 바빴고, 그 때문에 내면적으로 연구의 충실을 기하는 데에 충분한 힘을 기울이지 못하였으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직 학술지의 정기적 발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이 대부분임은 심히 유감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도 그 중의 하나이었으며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그러한 성질의 학술지의 창간호를 내게 된 것을 한편 부끄러이 여기며 타편 늦게나마 내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동시에 앞으로 꾸준한 발전이 있기를 기약하고 싶다. 당분간은 연 2회 춘추로 발간하고 앞으로 경비지판(經費支辦)의 길이 확립함에 따라서 회수를 늘이려고 한다.

II. “서울대학교 법학”의 발간

“서울대학교 법학”은 창간호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논문, 자료, 판례연구 및 서평 등을 실어 법학도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자타가 공인한다. 1959년 법학지 창간호가 발간될 당시 저는 법과대학 4학년이었고, 교과서만 읽던 학생으로서 심혈을 기울여 발표하신 교수의 연구논문과 자료, 판례평석을 처음으로 접하면서 법학을 학문으로 연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느꼈고, 이제 우리나라 대학도 구색을 갖추어 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먼저 밝히고 싶다.

법학지의 위상과 역할이나 학문적인 평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저는 법학의 발간에서 편집조교로서 또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일어난 일을 몇 가지 소개하는 것으로 소임을 할까 한다.

저는 1962년 8월에 법과대학 조교로 발령받아 당시 사법대학원의 일을 도우면

서 법학의 원고를 수집하고 편집에 관여하여 교정을 보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교수의 원고를 보면서 과연 이 글을 논문으로 실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생겨 당시 이한기 학장께 그 사실을 고하고, 다시 수정을 부탁드리기도 하고 자료로 싣기도 한 일이 있음을 밝힌다. 사실 조교의 신분으로 교수의 논문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현명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넘길 때에 법학의 위상에 흠이 가는 것이고, 오히려 빈축을 사게 된다는 생각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옳다고 느껴 그 시정을 하도록 한 것이다.

법학지는 제3권까지는 국판 세로쓰기로 발간했으나 제4권부터는 4.6 배판 가로쓰기로 편집하였고, 제5권 제1, 2호까지 법과대학 또는 법학회의 이름으로 발간했다. 그리고 1964년에 발간된 제6권부터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인수하여 그 맥을 유지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법학지를 발간하면서 창간호의 편집후기에서 보는 것처럼 1년에 1호, 2호 두 권을 내고, 재정문제가 해결되면 그 권수를 늘이겠다는 다짐을 했으나, 그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아니했음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제3권의 경우 제1호가 1961년에 발행되고, 제2호는 1962년 5월에 나왔으며, 1962년 12월에 제4권 제1, 2호를, 1963년에 제5권 제1, 2호를 병합해서 출간한 것이 그 보기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용조달의 문제와 원고수집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법학지의 발간도 순조로운 것이 아니었음을 드러낸다.

1980년 배재식 교수가 연구소장으로 취임하여 법학지의 간행을 늘이고자 노력하여 1981년 제22권은 제1호에서 제4호까지 4권이 출간되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후에도 병합호를 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기기도 했다. 저는 1997년에 법학연구소장으로 임명받아 적어도 법학지를 연 4회 발행하도록 힘을 쏟기도 했다. 그리고 법학지는 특별기금으로 연구가 이뤄진 경우 특별호로 발간되기도 했다. 1971년에 국제법학원 개최 해외파견 판·검사 제1진 귀국논문집을 비롯하여 1979년 아산재단기금에 의한 연구논문집까지 4권의 특별호가 그것이다.

III. 화갑기념호와 정년기념호

1962년에 간행된 제4권 제1, 2호는 정광현 교수의 화갑기념호로 꾸며졌다. 교수가 화갑이 되실 때까지 계시면서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를 지속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흔한 일이 아니고, 이는 모두가 경하할 일이었다. 그리하여 화갑기념특

집에서는 그 선생님의 연구업적과 가르침에 대하여 회고하면서 후배교수들이 정성을 기울여 기념호를 준비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리고 교수는 법률상 만 65세가 되면 정년퇴임을 하게 되고, 1967년에 정관현 교수의 정년퇴임에 따라 제9권 제2호는 정광현 교수 정년퇴직기념호로 발간하게 되었다.

화갑기념호는 화갑을 맞이하시는 교수께 바치는 특집이다. 정광현 교수의 퇴임 후 10년이 되어 1977년 이한기 교수의 회갑, 1979년 정희철 교수, 1980년 김증한 교수와 김기두 교수가 차례로 화갑을 맞이해서 그 특집을 마련했다. 그리고 정년퇴임을 하시는 선생님이 차례로 나오면서 정년기념호를 꾸미게 되었다. 1985년 4월에는 정희철 교수의 정년기념호, 1985년 10월에는 김증한, 김기두 교수의 정년기념호가 꾸며지고, 교수의 연세에 따라 개별적으로 화갑기념호와 정년기념호를 5년에 걸쳐 특집을 꾸미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교수마다 5년 사이에 화갑기념호와 정년기념호를 따로 따로 마련하는 것은 비용문제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리하여 90년대 초에 편집위원회에서 화갑기념호를 내던 정년기념호를 내던 교수의 의견에 따라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기념호를 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는 대체로 동의했으나, 그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가 문제였다.

저는 우리 선배교수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하고, 제가 회갑이 되는 1994년부터 시행하자고 제안하여 1994년 권영성 교수와 저는 법학지의 화갑기념호를 받지 않기로 하고, 1999년 정년기념호를 증정받았다. 그 후에 이것은 정착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법학지는 1993년 김철수 교수의 화갑기념호(제34권 제2호)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없어지고 정년기념호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참여하여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도 고쳐야 한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문제를 제기하여 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IV. 맺는말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긴장관계가 유지되면서도 세계에서 12대 무역 대국으로 성장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6.25 전쟁 등 숭한 시련을 극복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 대학이 오늘날 학문의

전당으로서 우뚝 서고, 열악한 상황에서 1959년 법학지를 창간하여 교수의 연구 수준을 높이고 한국의 법률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닦아 주신 여러 스승님의 공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날 IT산업 등 첨단과학이 발달하고 경제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져 어느 시대보다도 살기가 편안해지면서 사회윤리의 타락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법치주의에도 많은 회의를 불러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검찰이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 드러나고 있는 현상은 법학 교육에도 그 책임의 일단이 있다. 이는 법의 이념인 정의를 외면하고 편의주의에 따라 제 몫을 챙기려는 그릇된 관념에서 오는 것이고, 법학교육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라는 정신을 심어 주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선배교수들이 닦아 놓으신 업적을 후배교수들이 더욱 닦고 빛내면서 오늘날 서울대 법학을 국제적 수준에서 손색이 없는 훌륭한 학술지로 키우고 있는 박정훈 법학연구소장을 비롯하여 법과대학 교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